

社會主義諸國의 經濟改革實態와 成果分析

-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이 北韓에 미치는 영향을 中心으로 -

國土統一院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調査研究計劃에 의거한 特殊課題研究의 結果報告書임.

II. 收錄된 내용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와 관련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改革實態와 成果分析

-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이 北韓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

研究執筆責任

吳 鎮 龍

(産業研究院 地域5室長)

刊 行 責 任

李 浩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I. 要約과 結論	3
II. 體制改革의 可能性	16
III. 中共의 經濟體制改革內容	22
IV. 中共經濟의 構造變化	31
V.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의 評價	43
VI. 北韓의 經濟發展方向	48

I . 要約과 結論

-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이 北韓에 미칠 影響 -

中共의 經濟開發戰略은 實用主義의 理念 아래 對外開放과 體制의 改革을 통해서 「體制의 效率」(x-efficiency)를 極大化시키는데 있으며 이것은 곧 生産性 提高에 窮極的인 目標가 있다.¹⁾

특히 이러한 戰略이 과급하는 效果가 어느 部門 혹은 體制의 어느 한 分野에서 制限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理念)·經濟開發戰略(路線) 經濟體制의 改革과 같은 세계의 「斷層」에서 동시에 多樣한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全面的인 性格의 體制改革 「實驗」으로서 과거 어느 社會主義 國家의 「類型」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特徵을 갖고 있다.

또한 體制改革의 根源(原動力)도 東歐社會主義 國家에서 一般的으로 나타나는 單純한 「위로부터의 革命」(revolution from above), 다시 말하면 指導層의 主觀的인 意志와 엘리트 그룹의 指導力에서 의해서 進行되고 있는 側面과 社會底邊 내지는 勞動集團에 의해서 集團利益을 擁護하려는 「아래로부터의 革命」的인 性格, 그리고 「밖으로부터(對外開放)의 충격」이 동시에 時差를 두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註 1) 中共의 體制改革의 推進現況·評價 및 그 窮極的인 目標에 대해서는 1985年 6月 慶熙大學에서 主催한 「共產圈의 體制變化와 韓國의 對應」의 第4分科에서 發表한 筆者의 論文 「中共의 體制變化」와 韓國(慶熙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5.6.15) 참조.

「多面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

中共에서 推進되고 있는 「體制改革」의 機能的인 分野에서도 일찌기 어떤 社會主義 體制改革의 類型에 구애점이 없이 「全面的인 特徵」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社會主義 中央執權的 體制가 體質的(機能的)으로 안고 있는 問題, 集權과 分權化의 갈등이란 側面에서도 分權化의 程度가 社會主義 類型에서 뿐만 아니라 흔히 開途國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뛰어넘어 既存의 體制를 「초월」해서 進行된다. 그만큼 體制改革의 면과 폭이 廣範圍 하다는 것을 證明해 주는 것이다. 中共에서는 分權化의 조치가 어느 한 分野 혹은 한 부문에서만 機能的인 圓滑과 伸縮性을 發揮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機能分散(De-Centralization)·權限委任(Delegation)·自治權附與(Devaluation)·民間委任(Privatization)과 같이 여러가지 形式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體制改革의 推進方向도 農村經濟의 生産性增大(인민공사의 해체·生産責任制導入)→都市經濟의 活性化→全經濟部門의 效率向上을 向해 단계적으로 發展해온 점과 그 內容도 價格·租稅·金融·換率등 「市場 메카니즘」을 導入함으로서 計劃經濟의 경직성을 補完하고 「計劃的 商品經濟」(中國式 表現으로)을 構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體制改革의 표리와 多樣性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要點만을 정리해 보아도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1. 價格體制的 改革

- 價格法則과 價格構造의 合理化를 통해 人民生活水準 向上, 物資·商品의 合理的 配分
- 市場價格과 協議價格 對象品目擴大
- 「品質價格差 制度」의 定着 品質高級化 誘導
- 國內價格과 國際價格, 原資材 價格과 完製品價格 農產品價格과 工產品價格, 公示價格과 暗去來 價格間의 隔差縮小
- 財政赤字의 原因이 되는 「價格補助金」의 大幅削減

2. 流通體制的 改革

- 政府商業組織과 商業企業間의 責任限界 明確化
- 都市商業企業의 自主權 擴大·自主市場擴大
- 都市末端流通組織인 供鎖社의 獨立債算制 實施
- 委託經營·請負經營·對處經營·聯合經營 등 多様な 經營方式의 導入

3. 財政·金融體制的 改革

- 「利潤上納制」에서 所得稅制로 轉換
- 財政補助金 縮小
- 租稅·金利·換率을 經濟調節의 지렛대로 使用
- 銀行이 企業運轉資金에의 進出
- 金融改革·國際金融市場에의 進出

4. 企業管理體制的 改革

- 財務·人事·購入·生産·販賣에 이르는 企業의 自主權 擴大
- 工場長의 責任權限擴大
- 勞動成果에 따른 分配→平均主義 排除
- 行政·企業의 分離原則의 適用
- 獨立採算制·工場長責任制·專門技術 優待措置擴大

이러한 革新的인 改革은 計劃經濟의 基礎위에 「市場經濟」의 이점을 살려 「中國式 社會主義」의 特性을 建立하고 對外的으로 經濟·技術交流를 擴大하여 強力한 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한다는 뚜렷한 目標에 따라 推進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時空을 초월해서 廣範圍하게 全面的으로 擴大되고 있는 中共의 體制改革이 北韓에는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앞에서言及한 體制改革의 諸般要因과 政策的인 措處들이 中共에서 「實驗」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北韓에서도 「實驗性」이 강한 側面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實驗」的인 側面을 고려해 볼 때 北韓이 全面的으로 中共의 經濟開發戰略을 답습하거나 그 發展코스를 따라 그대로 對外開放과 經濟體制改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北韓은 中共과는 다른 經濟規模·與件·體制와 歴史的 背景이 다른 經濟生活을 營爲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政策이라고 해서 中共에서의 「實驗」이 北韓에서도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金日成이 現體制보다 實用的이고 效率的인 政策을 選擇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體制

的인 與件이 成熟되어 있느냐 하는 점도 크게 問題가 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體制改革과 發展過程이 東歐에 미친 影響이 「直接的」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또 東歐의 여러나라 사이에서 進行되는 國家間的 各기 다른 體制改革의 「實驗」도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相互作用」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影響을 주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²⁾

특히 앞에서 言及한 體制改革의 여러가지 蓋然性있는 資料를 檢討해 볼 때 中共의 體制改革은 장기간에 걸쳐 「象徴」적인 影響을 주거나 北韓의 體制改革을 加速化시키는 程度의 「相互作用」의 效果가 있다는 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쉽게 판단이 간다.

따라서 여기는 中共의 改革이 보다 더 「直接的」으로 作用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은 中共의 體制改革과 變化가 北韓에게는 全面的으로 影響을 준다고 볼 때 北韓의 現在 體制와 政策으로 보아 다음「네가지 類型」 가운데 北韓은 과연 어떤 形態의 政策變化를 기도할 것인가를 살펴보자.³⁾

註 2) 소련에 관해서는 Edward A. Hewett, "Economic Reform in Soviet Union", The Brookings Review(1984. SPR), 東歐에 관해서는 그의 또 다른 著作 The Economics of Eastern Europe, (Nebraska, Lincoln, :Cliffs Notes, Inc. 1978) pp.35-44를 참조할 것.

3) 특히 E.A. Hewett의 "Economic Reform in Soviet Union"에서 그는 개방형 體制改革과는 相對的인 概念으로 이와같은 「네가지 類型」을 提示하였다. pp.11 參照.

1. 既存體制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
2. 既存體制을 變更하지 않으면서 政策的인 變化만 試圖한다.
3. 分野別로 部分的인 改革만을 推進한다.
4. 體制的 急進的인 改革을 推進한다.

여기서 北韓이 選擇할 코스를 단정하기 전에 이제까지 專門家들이 보아 왔던 北韓의 體制改革의 方向을 먼저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80年代以後 이제까지 專門家들은 대체로 두개의 方向에서 「變化의 可能性」을 예시해 왔다.

첫째, 社會主義 國家에서 經濟發展 초기에 나타난 현상, 즉 「어느정도 量的 成長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計劃經濟는 곧 침체에 直面하게 되고, 그 결과 體制的 改革과 政策的인 制度修正의 過程을 거친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지속한다」는 일반적인 論理가 北韓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도 결국에 가서는 「質의 經濟」로 가기 위해서는 「內包的 成長」(Intensirve growth)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바로 부분적인 「體制改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中共이 北韓의 體制改革에 必然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도 단계적으로 北韓이 이러한 「質的 轉換期」의 정점에 와 있는데다 中共·北韓의 體制的 「類似性」, 그리고 地理的인 「近接性」과 함께 과거 30年동안 모두 「毛澤東思想」과 「金日成의 主體思想」의 질곡에 메어 있던 동일한 理念的 「共感帶」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中共式的 變化」를 北韓도 어느정도는 「收容」할 것이라는 展望이 이러한 論理의 배

경이 되고 있다.⁴⁾

둘째로는 北韓의 경직된 計劃體制가 한계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 지향적인 工業化政策이 안고 있는 本質적인 問題때문에 부분적인 대외 개방과 積極적으로 貿易政策을 遂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은 規模의 人民經濟, 좁은 國內市場이라는 制約과 對外競爭力의 缺與, 生産性增大 要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北韓도 어느 정도의 開放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北韓도 개방화 政策을 통해서 市場 規模를 擴大하고 최적규모와 조업규모간의 격차를 줄여 생산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海外市場의 進出에 따른 競爭力 強化를 통해 生産性的의 誘因 效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開放」의 이점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論理이다.

특히 이러한 論理의 배경에는 對外開放을 통해 積極적으로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中共이 成功的으로 工業化的 속도를 가속화해 온 사실과 開放과 體制革新의 結果가 「內部經濟 活性化」의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에게는 肯定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⁵⁾

註 4) 이러한 論旨를 가지고 있는 論文은 적지 않다. 특히 金東奎 「對外 貿易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國土統一院：朴春三 「對外經濟協力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國土統一院：玉城素 「北朝鮮は 解放體制に向かりか」 「アジア時報」 第 177 號 (1985.8) pp.8-25 에서 中共式的 變化가 北韓에도 影響을 주고 있으며 北韓이 經濟的 質的 改善을 위해 「開放의 專門」을 열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5) 이러한 主張의 代表的인 專門家를 예로 든다면 金康烈教授를 들 수 있다. 즉 北韓은 體制內에 存在하는 限界와 경직성을 解決하기 위해서 對外開放이 불가피하며, 또 앞으로도 그런 方向으로 發展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代表的인 論文은 「北韓의 經濟構造」 (第 28 次 統一問題學術세미나 論文集：嶺南大學效 統一問題研究所：1984 年 5 月 31日)

그러나 필자가 이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이 北韓에 미치는 影響」을 完成하기 위해서 檢討한 北韓의 經濟現況·體制 그리고 發展方向에 관한 可能的한 資料(文件)와 이제까지 알려진 北韓의 經濟成果에 관한 각종 지표(통계)를 分析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위에 언급한 「두개의 可能性」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北韓에서 나타날 改革의 方向도 단기적으로는 두번째 코스인「既存體制를 變更하지 않으면서(부분적인) 政策變化를 試圖」할 것이라는 점과 동시에 「體制的效果」에 대한 強力한 必要性이 대두되는 金日成이후보다 장기적인 단계로 발전해 간 다음에서야 세번째 코스인 「부분적인 改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⁶⁾

우선먼저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北韓을 필경 中共의 經濟發展 戰略이나 體制改革 그리고 그 政策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北韓이 選擇해야 할 政策의 모범답안으로는 「活用」하지 않을 것이라는 判斷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은 中共이 시도한 바와 같은 「市場型的 改革」(market reforms)을 추구하지 않고 소련·東獨에서 一般的으로 나타나는 「體制的 變型없이」 「집권적 계획 시스템 내에서」 「부분적으로 體制的 活性化」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型的 改革」(technoc-

註 6) 最近(1985.10)에 나타난 北韓의 主要 言論들을 주의해 보면 이런 사실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 代表的인 例로는 金日成의 「1985年 新年辭」(勤勞者, 1985.1號) : 金正日的 「經濟開發에 있어서 郡의 任務와 役割」(勤勞者, 1985年 3號), 특히 金日成의 「세카이」 편집장에 대한 「서면회답」(勤勞者, 1985年 8號)에서는 이러한 事實을 強力하게 반영하고 있다.

ratic reforms)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⁷⁾

왜냐하면 中共式의 「市場型 改革」은 결국 시장메카니즘의 導入이 이루어지고 「生産關係」에 까지 變化를 일으켜 改革과 變化의 幅이 넓고 「全面的」일 뿐만 아니라 窮極的으로는 「社會主義 體制와 價値觀」의 變化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종의 「體制的 革命」의 連鎖反應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組織改編을 통해서 「機能的인 伸縮性」을 發揮하면서 科學·技術의 發展을 통해 「體制的 모순」을 克服하는 方法을 選擇할 可能性이 높은 것이다.

이것은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自立更生에 입각한 自主的 民族經濟의 建設」(1982.3)이라는 基本的인 틀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技術指向的 生産力增大」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體制急變에 따른 「危險負擔」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北韓의 指導者들로서는 쉽게 選擇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① 「主體思想」을 견지하고, 強力한 人民動員體制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金正日의 政治的 安定과 正統性을 確保해 준다. ② 外部(中·소)로부터의 壓力과 干涉을 배제할 수 있다. ③ 急進的인 體制改

註 7) 이러한 分析은 최근에는 보편화된 것이지만 Selucky R.에 의해 처음으로 '유형화' 되었다. R.Selucky,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N.Y.: Praeger publishers, 1972), pp.43-56. 특히 社會主義國家의 經濟發展이 시장메카니즘과 같은 生産關係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政權의 上층구조 즉 엘리트의 科學과 技術向上에 따라 體制矛盾을 해결한다는 뜻에서 北韓의 경우에도 가장 適合한 形態의 變化로 보인다.

革을 통해서 기대할만한 「體制·極大化」의 效率이 存在하지 않거나 (이미 現在의 狀態에서 北韓은 최대한의 體制的 效率을 얻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效率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體制改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명백해진다.

첫째, 폭넓은 對外開放이나 急進的인 體制改革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經濟特區」를 설치하거나 「合作投資」 혹은 「技術·設備의 大規模導入」과 같은 넓은 의미에서 政策轉換의 可能性은 높지 않을 것이다.

셋째, 體制的 類似性이 中共보다는 소련과 비슷해지면서 技術·設備 내지는 企業의 經營方式·管理體制를 소련의 체제를 답습하므로써 보다 더 소련식 체제의 유사성을 가진 計劃經濟管理體制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理論적으로는 「主體思想」으로 무장되어 있고 合理的이며 管理能力이 있는 「테크노크라트」의 기용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흔히 이야기 하는 「專」쪽에 偏向된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니라 「專」적인 무장이 되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紅」의 강한 색채를 지닌 「又紅又專」人物들이 北韓의 管理階層에 등장하는 傾向이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그러나 北韓의 對中·소關係, 특히 對南戰略과 軍事政策에는 變化가 없을 것이며, 軍需産業에 대한 投資와 政策에서 投資의 폭은 점차 縮小可能性이 높고 軍需産業의 專用이 試圖될 것이다.

여섯째, 그러나 社會福祉에 關心을 가질 것이며 人民의 生活水準을 신속히 높인다기 보다는 노동시간의 제한이나 보다 廣範圍한 娛樂·休養制

도를 갖춤으로서 社會全般的 「生活環境造成」에 힘쓸 것이다.⁸⁾

그러면 中共의 體制改革은 北韓의 經濟發展과 體制改革에 具體적으로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中共의 影響을 가장 廣範圍하게 받아들일 分野는 農業과 對外貿易部門이 될 것이다. 그리고 産業政策과 企業管理分野에서 어느정도 권한위임 (Delegation) 은 이루어질 것이나 地方化나 機能分散 (Decentralization) 의 水準으로까지 擴大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企業의 獨立性이나 獨立採算制로 發展할 可能性을 배제할 것이며, 權限이 委任되는 만큼 管理의 集中化 現象은 더욱 強化될지도 모른다.⁹⁾

이렇게 볼 때 工場이나 企業所가 中央 當局에 納付하는 「國家企業利益金」의 規模가 縮小되고 企業所體制에 「利潤留保」의 폭이 커질 展望은 希薄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企業管理體制의 改革은 急激히 대두되고 있는 「생산체감요인」을 제거하는 程度의 水準, 즉 地方豫算事業의 活性化의 水準에서 이루어

註 8) 祖國解放 40 돛과 黨倉建 40 돛을 맞으며 經濟建設의 進군속도를 더욱 다그치자」(근로자, 1985年 7 號)의 문장은 北韓이 展開하고 있는 經濟建設의 方向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主要經濟建設의 方向과 體制改編의 範圍까지도 言及하고 있는 점 (p.5-6)은 주목할만 하다.

9) 김정일, 「社會主義建設에서 郡의 位置와 役割」(1964年 3 月 18 日)(勤勞者, 1985年 3 號)에서는 經濟管理의 集中化에서 郡의 役割을, 특히 強調하고 있다. 특히 pp.13-18의 「郡안의 經濟部門들의 發展과 부문사이의 連繫의 強化」와 「郡經濟의 綜合的 發展을 통한 군들 사이의 차이의 克服」이라는 두 章에서는 北韓經濟의 集中化의 必要性和 意味를 強調하고 있다.

질 것으로 보인다.

中共의 體制改革이 農業에 미칠 影響이 크다는 것은 크게 보면 中共의 「人民公社解體要因」이 北韓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北韓의 農業은 國營農場(10%)와 協同農場(90%)의 두가지 形態가 있으나 生産要素의 철저한 社會化와 生産物의 勞動에 의한 分配를 시행하고 있으나 生産資材供給이 충분치 못하고 技術落後로 인해서 아직까지 自給自足の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生産手段의 부족과 피동적인 經營方式을 버리고 창의성과 生産意慾을 促求할 수 있는 體制(中共의 경우 ‘生産責任制’)의 導入이 必要할 것이다. 특히 人民公社解體以後 中共의 農業이 劃期的으로 신장한 점이 ‘體制的 效率’에서 온 結果라고 할 때 北韓도 70年代의 平均 3%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農業體制的 改편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것이며, 그 모델은 中共의 ‘生産責任制’ 形態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中共의 體制改革이 北韓에 가장 積極的인 影響을 주는 면이 있다면 對外貿易分野로 볼 수 있다.

北韓은 對外貿易을 단순한 外換獲得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經濟發展의 「積極的인 補助手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中共의 「輸出先行型」정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①輸出企業과 海外市場의 關係를 強化하는 貿易商社機能 強化 ②輸出獎勵를 위해 수출에서 발생하는 利益金을 높은 比率로 該當企業에 配分 ③西方과의 合作을 위한 法律條件 및 環境造成 ④

輸出産業 投資擴大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中共의 「合作企業」의 운영에서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措置 즉 ①生産物에 의해 支拂이 전제되는 장기차관, 혹은 라이선스의 利用, ②製品에 의한 대불을 전제로 한 프랜트 혹은 生産設備의 導入 ③下請 혹은 合資企業方式의 運營이 그것이다.

동시에 求償貿易의 다양한 形態가 北韓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展望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北韓에서도 「自立更生」의 본래의 의미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¹⁰⁾

中共의 體制改革이 北韓에 미칠 影響은 이러한 政策的 措處 以外에도 「廣範圍」할지도 모른다. 다만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特徵이 있을 것이다. 中共이 「中共式 社會主義」를 強調하고 있는 것처럼 北韓도 크게는 끝내 「主體思想」의 범주를 넘지는 않는 범주내에서 體制의 效率을 成就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註 10) 오진용 「北韓의 對外貿易」(共產圈經濟, (계간) 産業研究院 1985年 9月號)에서는 統計적으로 北韓의 對外貿易을 分析하면서 80年代 後半에서도 對外貿易이 劃期的으로 增加하기 어려우며 또 매년 年平均 10%程度 總量規模가 늘어나는 現在와 같은 狀態가 經濟의 극단적인 閉鎖狀態를 지속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北韓은 앞으로 「地域的」으로 輸出入의 多變化를 시도한다기 보다는 제한된 貿易相對國에 대해 보다 다양한 交易形態로 總量規模를 늘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Ⅱ . 머리말 - 體制改革의 可能性

소련과 東歐를 社會主義諸國으로 부르고 있으나 사실 모두 典型的인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社會主義體制를 수용하는 과정, 國家의 經濟環境, 指導者의 理念 (idea) 과 政治體制에 따라 發展過程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類型化」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극단적인 小規模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알바니아를 제외하고 대체로 두가지 다른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形態는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體制的 骨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體制的 단점을 補完하여 부분적으로 分權化나 合理化의 길을 모색하여 經濟運營의 伸縮性을 보이는 나라들인데 이러한 「절충형」 (Compromising) 體制的 國家들은 폴란드·루마니아·체코·동독·불가리아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計劃經濟의 基本的인 '틀' (frame) 을 흔들지 않으면서 合理的인 可能性을 모색하는 體制를 指向하여 中央集中管理 分野의 縮小, 分權化 企業의 收益性 認定, 契約制度의 採擇과 같은 方式으로 體制를 補完하였다.

둘째, 形態로는 計劃經濟體制보다는 비교적 발전된 形態의 「市場社會主義」 (market socialism) 을 指向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유고와 헝가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國家들은 「經濟改革思想」을 모체로 해서 價格機能의 積極的인 導入, 企業의 利潤追求, 自主管理制度, 投資決定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計劃經濟特性和 資本主義的 市場의 機能을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는 體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두개의 각기 다른 形態의 計劃經濟體制를 깊이있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體制變化」가 進行되고 있으며, 또 거의 한결같이 이들 國家들 사이에서 「相互作用」을 통해서 變化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들 다섯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意思決定權의 所在
- ② 投資의 決定
- ③ 價格의 形成
- ④ 誘因制度
- ⑤ 競爭制度

이러한 計劃經濟體制的 變化要因들이 이들 國家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自律과 分權化」의 현상이 강화되어 루마니아에서의 分權化의 諸般措處들이 헝가리에서도 표본이 되었고 유고의 自主管理制度는 여러나라에서 可能性의 「實驗」을 계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헝가리의 「新經濟體制」(New Economic Mechanism)나 유고의 「市場社會主義」體制的 劃期的인 改革은 政治社會的인 環境의 改革과 병행되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모든 要因들이 社會主義 體制내에 存在하는 「타성」 때문에 아직도 전면적인 改革으로까지는 擴散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면 社會主義 國家에서 經濟體制改革이 일어나게 되는 基本的인 동기는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改革이 社會主義 國家들간에는 어떻게 과급되며 서로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 것인가. 이러한 問題는 단순히 比較經

濟體制의 觀點에서만 分析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은 아니다. 특히 東歐의 여러 나라들이 經濟規模·環境 相異한 社會條件과 體制를 갖고 있기 때문에 改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각기 自國의 環境에 알맞는 制度와 運營方式을 採擇하게 되기 때문에 改革의 동기와 배경이 같은 내용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후르시초프 (Khurshchev) 이후 소련의 體制改革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體制改編의 「幅」을 예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東歐에 미친 影響은 象徵적인 표본이 되었다.

첫째, 改革은 體制의 基本的인 운영에 影響을 주지 않는 범주내에서 「行政的인 措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企業의 機能強化와 부분적인 시장의 役割이 必然的이라는 점이다.

둘째, 經濟가 發展되고 多樣性이 대두됨에 따라 企業의 數, 商品의 種類가 急激히 增大되어 經濟主體間의 連關性的 폭이 增大되어 計劃經濟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며 投資의 우선순위와 유용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고 있다.

셋째, 리베르만 (Evsei Liberman) 이후 利潤이 經營成績의 評價基準이 되어야 한다는 合理性和 企業의 독립채산제·自律이 強調되고 장려금이 生産性向上의 촉점이 되고 있다.

넷째 과거와 같이 生産要素와 勞動力의 무한한 投入만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生産性を 높여야 한다.

다섯째, 그러나 計劃經濟의 脆弱點, 즉 과도한 中央集權, 經營者의 制約된 活動範圍, 不合理한 價格體制를 改善하기 위한 努力도 「社會主義 體

제의 壁」을 넘지 않는 보수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基本的으로 中央集權的인 生産計劃, 投資配分 價格管理에 커다란 變化를 주지 않는「體制의 테두리」내에서의 「改革」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련의 經濟體制 改革에서 나타난 問題들이 北韓에는 어떠한 影響을 주었을까. 이것은 하나의 結果論에 그치는 것이지만 北韓의 經濟體制變化에 어떤 肯定的인 要因을 주었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證據를 發見할 수 없다. 蓋然性있는 資料는 오히려 北韓에서는 「스타린식經濟」(command economy)가 단기적인 效率을 發揮하였거나, 그런 體制가 하나의 發展의 動力이 되었다는 점을 間接的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體制나 經濟開發戰略 내지는 運營方式을 고려해 볼 때 北韓은 별다른 體制상의 「改革過程」을 거치지 않고 80年代의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北韓은 알바니아나 쿠바와 비슷한 처지에서 政治的 安定과 體制의 穩固성을 그대로 유지해 왔는데 그것은 세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배경이 있다.

첫째, 自主·自立을 내세운 金日成의 교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政治的으로는 中·소의 強烈한 影響을 받으면서도 經濟體制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둘째, 金日成의 일인 독재체제와 「스타린식 經濟體制」가 統治體制의 定着에 어느정도 效果를 볼 수 있었다는 점, 셋째, 國境經濟의 斜角地帶에서 強力한 消費抑制과 고도의 蓄積을 可能하게 하는 軍事經濟 性格의 體制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80年代에 접어들면서 北韓의 經濟도 새로운 局面을 맞게 되었다. 우선 對外的으로 國際經濟의 發展速度가 과거에 비해 신속히 展開

될 뿐만 아니라 東·西間의 協力이 強化되고 技術交流가 經濟發展의 重要한 手段이 되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들도 이제는 對外開放과 經濟協力を 통해서 經濟發展을 圖謀하는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社會主義 經濟가 바로 「폐쇄적인 自立」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벗어난 것이다. 또한 對內的으로는 社會主義 國家에서 흔히 體制改革이 容易하게 이루어지는 「권력의 이양단계」에 있다는 점도 體制改革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金正일은 金日成과는 달리 비교적 이데올로기나 體制의 影響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改革」을 추구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도 이제는 「스타린식 경제! 體制가 안고 있는 本質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고 그 閉鎖性을 극복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基本的인 이유가 더 體制改革의 可能性을 크게 하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이 직면한 이러한 對外的인 배경이외에 北韓의 주변에서 가장 旺盛하고 強力하게 과감히 과거의 經濟體制를 革新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中共의 變化가 北韓에 미칠 影響은 무엇인가? 이점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中共의 經濟發展과 體制變化는 앞에서 言及한 東歐의 「절충형」이나 發展된 形態의 「시장사회주의」라는 범주를 뛰어 넘고 있다. 中共은 이미 東歐의 體制改革의 단계에 앞서가며 計劃經濟의 體制 (System) 와 구조 (Structure) 的인 側面에서 엄청난 다양성과 伸縮性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社會主義 國家보다는 「전면적인 改革」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中共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經濟發展戰略과 體制改

革이 어느 社會主義 國家의 體制를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中國의 特色있는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中國式 社會主義」로의 改革은 北韓이 選擇할 수 있는 또다른 形態의 모형(model)이라는 側面에서 깊은 關心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 論文은 中共의 經濟發展과 體制改革이 北韓에 미칠 수 있는 廣範圍한 影響을 分析하는데 焦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言及한 바와 같이 사실 比較經濟體制의 觀點에서 中共의 體制變化가 北韓에 미칠 影響을 고려한다는 것은 經濟規模와 環境 내지는 性格적인 側面에서 편차의 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中共이 經濟開發戰略, 體制改革, 構造變化 및 經濟改革에 대한 評價와 展望을 分析하고 이러한 要因들이 轉換期의 北韓經濟에 나타날 可能性과 影響을 표출하고자 한다.

Ⅲ. 中共의 經濟體制改革內容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이 本格的으로 시작된 것은 毛澤東時代의 平均主義 (Equalitarianism)의인 自主經濟體制로부터 國民經濟의 全般的인 水準向上을 目標로 하는 現代化政策을 추진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現代化政策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 노출된 計劃經濟體制的 「限界」를 克服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體制改革의 具體的인 內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中共의 計劃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要點을 정리할 必要가 있다.

- 目標指向的인 體制的 경직성과 非效率
- 所得分配上的 平均主義에 따른 非競爭的 經濟構造 (인센티브 결여)
- 國內技術開發의 限界 및 資本設備의 技術的 落後
- 重工業 偏重 成長戰略에 따른 産業間의 不均衡 深化
- 農業의 低生産性 (人民公社制度·耕作地面積의 減少·生態系의 破壞)
- 失業의 만연과 고급노동력의 부족

이와같은 體制上的 「限界」 이외에도 「自立更生」(中共은 여전히 自立에 經濟開發의 目標를 두고 있다.) 戰略에 대한 보조적인 手段으로서 對外開放을 통한 經濟交流의 必要性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것은 우선 資本의 側面에서 극단적인 消費抑制와 農業剩餘의 工業資本化를 통한 國內資本形成의 한계가 나타났고, 技術落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先進技術의 도입과 協力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經濟開發에 必要한 外貨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輸出」 擴大政策이 現實的으로 必要하였다.

결국 中共에서는 體制의 改編이 現代化政策의 實現에 따른 「戰略」의 인 問題로 대두되었고, 또한 그런 배경때문에 「體制改革의 폭」도 실은 現代化政策의 推進過程에 따라 점진적으로 擴大되었다.

우선 政策의 추진과정은 보아도 現代化政策(1976) : 고도성장전략 (大規模 重化學中心의 턴키베이스의 工場導入) → 國民經濟 10 個年計劃(1978-85) : 擴大調整 → 調整計劃(1979-81) : 縮小調整 (經濟開發의 基盤造成을 위한 經濟體制의 부분적 改革, 重化學部門 縮小調整, 農·工併進政策, 國民生活安定 → 6次 5 個年開發計劃(1981-85) : 安定成長 (經濟開發의 障礙要因 除去, 經濟體制의 劃期的인 改革提起, 輸出擴大·輸入抑制와 재정수지 安定, 技術導入 生産施設 改造擴充) 과 같은 政策의 轉換過程에 따라 組織的이고 구조적 인 改革이 실시되었다.

體制改革의 基本方向은 먼저 中國의 特殊한 經濟環境 (産業構造的으로 80%가 農民)을 고려하여 農業의 活性化에 着手하여 人民公社의 廢止와 農산물 수매가격의 인상을 통한 劃期的인 食糧自給計劃에서 都市의 企業所로 점차 擴大하는 形式을 취하였다. 즉 農村의 生産力增大 → 都市經濟의 活性化 → 全體經濟部門의 效率提高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6차 5개년계획(1981-85)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經濟調整을 통한 經濟의 安定基調回復後에는 經濟構造 및 管理體制의 改革을 통해서 均衡成長의 基盤造成에 努力하였다. 그 重點推進分野를 보면 經濟成長의 과실을 인센티브제공, 人的資本形成, 技術導入과 같은 分野에 活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既存企業의 整理·改編·聯合과 企業의 技術改造를 推進하였다.

이러한 措處는 對內經濟體制의 改革과 對外開放의 속도를 유기적으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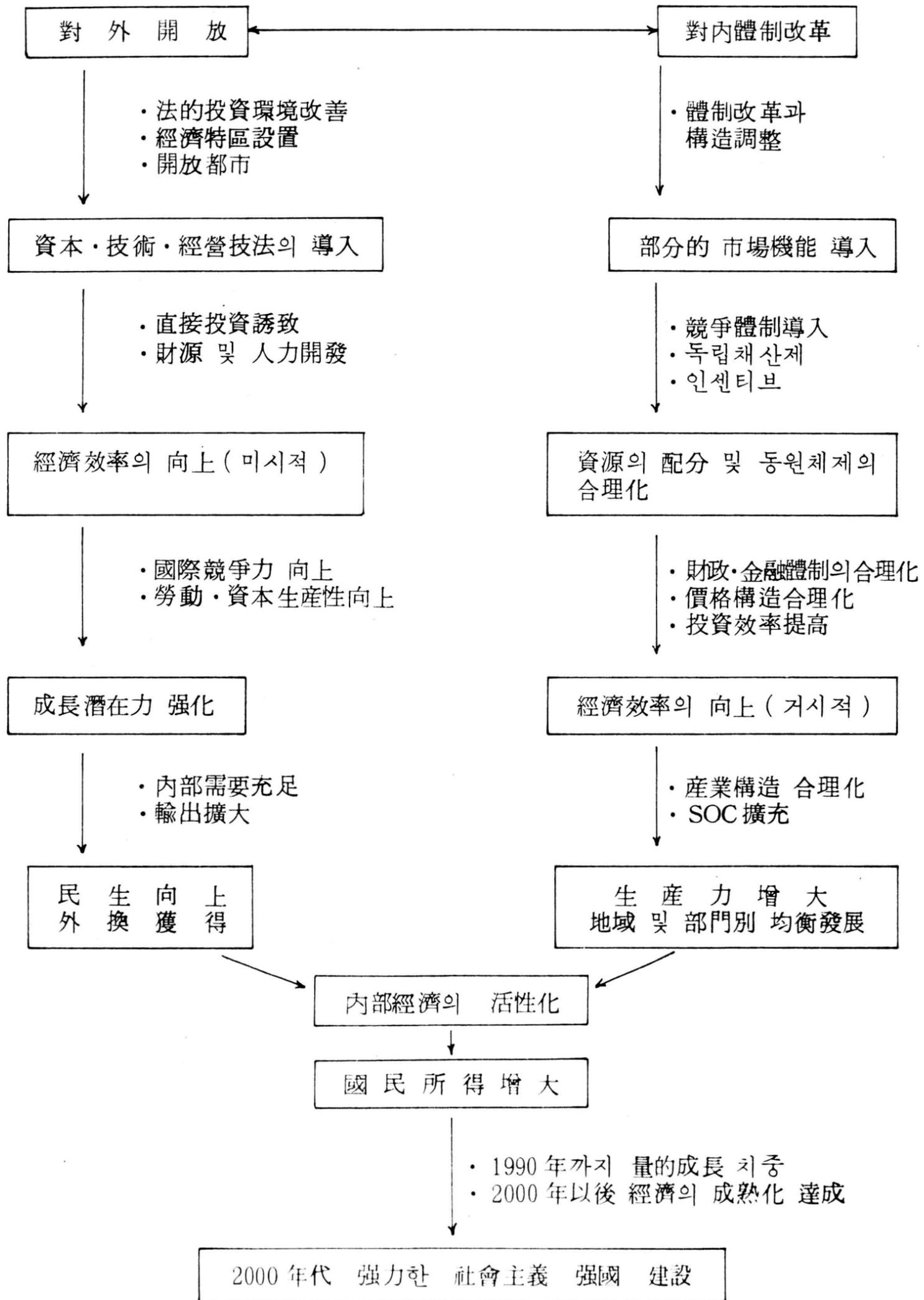
결하여 體制改編의 效果를 「極大化」시키려는 政策이었다. 다시 말하면 內的으로는 價格·租稅·金融·換率 등 시장메카니즘을 積極적으로 導入하여 計劃經濟의 경직성을 補完하고 「計劃的 商品」경제체제를 構築하고 對外的으로는 開放을 통해서 技術·經營·設備를 積極적으로 도입하여 窮極적으로 自立과 內部經濟 活性化의 目標를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政策의 全般的인 흐름을 알기 쉽게 圖式化하면 다음 (圖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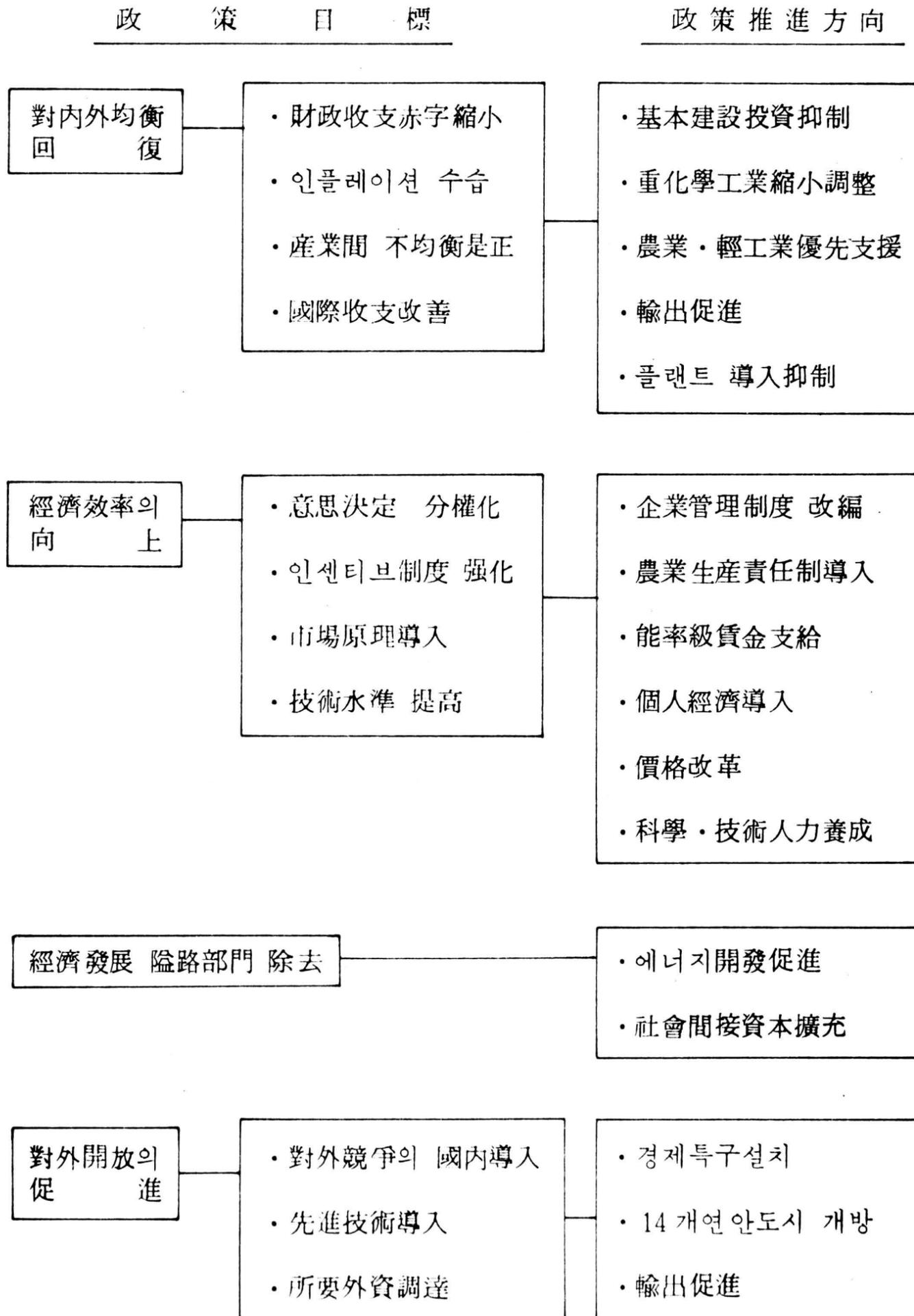
또한 7차 5 個年計劃 (1986-90) 이후의 經濟開發의 目標가 現實에 입각한 착실한 성장으로 90 年代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있다고 볼 때 政策目標와 推進方向을 다음 (圖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體制改革의 窮極的 目標가 「經濟效率의 向上」이며 體制改革이 단순히 「組織的」인 분야의 改編이 아니라 새로운 體制의 「定立」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圖 1>

中共 開放化政策의 흐름



<圖 2>



「經濟效率向上」이라는 改革의 窮極的인 目標은 결국 社會主義 經濟를 機能的으로 活性化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改革 前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內 容	改 革 前	改 革 以 後
人民公社 (農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社合一：行政機能과 經濟機能이 結合되어 있었음. · 人民公社→生産大隊→生産隊의 垂直的 組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社의 分離：農村의 最下單位組織인 鄉 人民政府 復活 · 農·工·商 聯合形成：生産隊를 農業生産合作社로 改組하여 完全 獨立.
企業管理 制 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三結合(勞動者, 幹部, 技術者의 代表)」方式에 의해 組織된 管理委員會에서 運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과 企業의 分離 · 企業長(工場長) 責任制度의 導入. · 責任制度는 ①生産經營計劃, ②商品販賣, ③價格策定, ④物資購買, ⑤資金使用, ⑥資產處理, ⑦機構設置, ⑧人事 및 勞務管理 ⑨賃金과 獎勵金, ⑩聯合經營등에 대해 自主權 부여 · 國民經濟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는 製品을 除外하고는 모두 「指導性計劃」에 包含시키거나 시장메카니즘에 맡김.

內 容	改 革 前	改 革 以 後
<p>勞務管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事：政府가 工場長 및 간부를 任免. • 賃金：國家가 策定한 基本給+年功給+보너스의 3種 給與體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働者職員代表大會制度」의 活性化로 일부 企業에서는 工場長을 선거에 의해 선출 • 혹은 간부 (職場主任, 工程主任, 班長, 組主任) 도 選舉에 의해 選出. • 基本給, 年功金에 일의 難易度, 勤勉性에 따른 給與와 成果給을 添加한 4種給與體制. • 精神勞働과 肉體勞働, 複雜勞働과 單純勞働, 熟練勞働과 非熟練勞働, 重勞働과 輕勞働으로 일의 種類를 나누어 知識人과 勤勉한 勞働者 優待 • 成果給 (能率級) 은 <경상적報獎金>과 <報獎金> 모두 活用 • 賃金の 差等化와 作業성과에 따른 賞罰原則의 철저한 適用으로 生産性 向上을 위한 인센티브 強化. • 勞働의 質과 分野에 따른 所得隔差 認定, 相互競爭體제의 誘導.

內 容	改 革 前	改 革 以 後
企業의 財 務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營企業의 利潤은 全額 國家에 上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利潤上納制 대신 「納稅制度」의 採擇. 1 단계 (1983.6 ~ 1984.9) : 企業 利潤에 55%의 法人稅를 부과하고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調節稅」부과. 2 단계 : (1984.10以後) : 價格 調整 完了以後 法人稅로 一元化, 나머지 利潤은 全額 企業에 留保.
流通體制의 改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市에서 商品의 流通은 商業部가 農村의 流通을 供鎖合作社가 分離하여 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年 都市·農村間의 流通의 區分을 廢止하고 供鎖合作社는 商業部에 吸收 合併됨. • 國家統一購買對象品目の 縮小(例 1983年 봄부터 酒類,棉花를 除外)하여 計劃초과분을 生産者가 市場에 자유로이 팔 수 있는 品目數와 範圍擴大. • 供鎖合作社의 運營을 國營에서 民營으로 轉換, 그 성과를 農民의 利益과 결부. • 物資를 供給하는 모든 企業은

內 容	改 革 前	改 革 以 後
		<p>自主經營體制로 轉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으로 指令性計劃에서 除外된 業種은 음식업, 서비스, 각종 雜貨, 이들 商品의 生産, 流通, 價格을 完全히 市場調節 機能에 맡김. • 그러나 일시에 해제하는 경우 충격이 크므로 단계적으로 價格을 통제가격에서 解除 (120 個 工產品 가운데 60 個 品目만 統制價格에서 해제하고, 農產品도 29 個 品目 가운데 19 個 品目만 價格統制를 解除함)

IV. 中共經濟의 構造變化

1. 經濟成長과 構造

中共經濟는 現代化政策 推進以後 農·工業生産에 好調(특히 農業部門의 劃期的인 伸張)에 힘입어 1978-84年間 대체로 높은 成長率을 記錄하였다.

특히 1979年以後에는 3個年 調整期間의 影響에 따라 成長速度가 減속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1년에는 安定化施策의 實施로 經濟成長이 3%대로 크게 鈍化되었으나 1982年부터는 高度成長의 局面을 맞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中共이 現代化政策의 構造的「調整」과 體制的 「改革」에 따라 일어나는 추세의 變化이며 전체적으로 緊縮趨勢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表1>

主 要 實 質 成 長 率

(%)

	1970 -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GNP 成 長 率	7.3*	11.7	7.0	5.2	3.0	7.4	9.0	10.0
國 民 收 入	4.8	12.0	7.0	6.1	4.8	7.4	9.0	12.0
農 工 業 總 生 產 額	7.3	12.3	8.5	7.5	4.5	8.7	10.2	14.2
農 業 總 生 產 額	3.4	9.0	8.6	3.9	5.7	11.0	9.5	14.5
工 業 總 生 產 額	8.7	13.5	8.5	8.7	4.1	7.7	10.5	14.0
重 工 業	9.3	15.6	7.7	1.4	-4.7	9.9	12.4	14.2
輕 工 業	7.8	10.8	9.6	18.4	14.1	5.7	8.7	13.9

* 1970-76.

부문별로는 農業과 輕工業의 우선정책에 힘입어 1970年代말부터 이 부문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이와 相對적으로 중공업 부문은 1979年以來 成長이 鈍化되어 198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가 1982년부터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表 2> 農工業總生産額構成

%

	1970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農 業	33.7	28.1	27.8	29.7	30.8	32.5	33.6	33.9	34.0
工 業	66.3	71.9	72.2	70.3	69.2	67.5	66.4	66.1	66.0
重工業	35.7	40.3	41.1	39.6	36.6	32.8	33.0	34.0	34.3
輕工業	30.6	31.6	31.1	30.7	32.6	34.7	33.4	32.1	31.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國民收支의 構造面에서는 國民生活向上을 위한 지속적인 政策과 1979年以後의 投資抑制政策에 따라 1978年을 고비로 投資의 比重이 점점 떨어지고 소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의 구조면에서도 社會的 消費의 비중이 대체로 8%선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個人消費比重이 消費增加趨勢를 주도하고 있다.

投資構造面에서도 生産的投資의 比重이 급격히 떨어지고 住宅·學校·病院 등 비생산적 投資比重이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表3>

國民收入構成比

%

	197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生産國民收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農業	41.3	35.4	39.3	39.1	41.6	43.9	44.9
工業	40.1	46.8	45.9	45.8	43.4	42.3	41.9
其他	18.6	17.8	14.8	15.1	15.0	13.8	13.2
支出國民收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投資	32.9	36.5	34.6	31.6	28.5	29.0	30.0
(生産的)	(23.6)	(26.2)	(22.2)	(17.2)	(13.3)	(13.4)	(15.7)
(非生産的)	(9.3)	(10.3)	(12.4)	(14.4)	(15.2)	(15.6)	(14.3)
消費	67.1	63.5	65.4	68.4	71.5	71.0	70.0
個人	61.1	56.3	56.9	60.3	63.6	63.2	62.2
社會	6.0	7.2	8.5	8.1	7.9	7.8	7.8

2. 物 價

現代化 推進過程에서 1979·80年 開發인프레에 따른 物價가 上昇하는 趨勢를 보이자 中共이 안정화 計劃의 一環으로 強力한 物價統制政策을 實施한 결과 1981年以後 物價上昇이 진정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國民消費性向의 增加趨勢와 物價에 대해서 中共當局은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表 4>

(%)

	1970 -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소 매 가 격	0.4	0.7	2.0	6.0	2.4	1.9	1.5	2.8
도 시 생 계 비	0.6	0.7	2.1	7.3	2.5	2.0	2.0	

3. 固定資産投資

國民收入에서 차지하는 總投資의 比重은 1978年 36%에 이르렀으나 그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1983년에는 30%선으로 下落하였다. 中共은 投資의 非效率를 시정하기 위하여 1979年以後 投資抑制政策을 實施하였고 1981년에는 安定化施策을 實施함으로써 固定資産投資가 1981년까지 萎縮되었다가 1982年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中共의 投資抑制政策은 民生安定을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1981년에는 그 減縮 幅이 컸으나 1982年부터 基本建設投資가 擴大되었다.

<表 5>

固定投資 (全民所有制部門)

	197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固定投資額億元	368.1	668.7	699.4	745.9	667.5	845.3	952.0	1160.0
(增加率)	(49.1)	(22.0)	(4.6)	(6.6)	(-10.5)	(26.6)	(12.6)	(21.8)
이 基本建設投資	312.6	501.0	523.5	558.9	442.9	555.5	594.1	735.0
(增加率)	(55.6)	(31.0)	(4.4)	(6.8)	(-20.8)	(25.4)	(6.9)	(23.7)

基本建設投資의 構成을 보면 工業·農業에 대한 生産的 投資의 比重이 줄어들고 住宅등에 대한 非生産的 投資의 比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基本建設投資를 위한 財源은 財政改革, 國·公營企業의 投資決定權 強化 등으로 國家豫算에 의한 조달비중이 1973年 83.8에서 1983年 58.3로 감소하였다. 특히 1980年부터는 國內銀行 貸付, 對外借款이 國家豫算外 資金調達方式으로 轉換되었다.

基本建設投資構成比

<表 6>

%

	1973 -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部 門 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工 業	55.4	54.5	49.1	49.3	48.8	46.9	47.5
重 工 業	49.6	48.7	43.2	40.2	39.0	38.5	41.0
輕 工 業	5.8	5.8	5.9	9.1	9.8	8.4	6.5
農 業	9.8	10.6	11.1	9.3	6.6	6.1	6.0
運 輸 · 通 信	18.0	13.6	12.2	11.2	9.1	10.3	13.1
其 他	16.8	21.3	27.6	30.2	35.5	36.7	33.4
投 資 類 型 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生 産 的	82.5	79.1	69.8	64.3	57.0	54.5	58.3
住 宅	5.7	7.8	14.8	20.0	25.1	25.4	21.1
其 他 非 生 産 的	11.8	13.1	15.4	15.7	17.9	20.1	20.6
財 源 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國 家 豫 算 內	82.5	83.3	80.0	62.5	56.8	49.8	58.2
國 家 豫 算 外	17.5	16.7	20.0	37.5	43.2	50.2	41.8

4. 財政·金融

1960-70年代를 통해서 대체로 黒字基調를 維持해 오던 財政收支는 1979年부터 급속한 財政規模 擴大와 함께 적자기조로 반전하였으나 1981年以後 財政緊縮政策實施로 적자 폭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財政支出은 1978-79年中 基本建設投資와 生必品 補助金 支給의 擴大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1980-81년에는 基本建設 投資의 減縮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1982年부터 基本建設投資의 擴大 등으로 다시 增加 趨勢로 가고 있다.

財政收入은 1979年以後 租稅收入의 增大에도 불구하고 企業利潤留保制度 實施 및 輕工業育成에 따라 企業收入이 감소함으로써 줄어들다가 1982年以後부터 工·商稅등이 계속 늘어나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1979-80年中 급신장세를 보이던 통화량은 安定化計劃에 의한 政府의 金融緊縮政策 實施에 따라 增加率이 鈍化되고 있는 추세이며 한편 金融機關의 신용대부는 增加率이 抑制되어 왔다.

財 政 收 支

<表 7>

(億元)

	197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財 政 收 入	662.9	1,121.1	1,103.3	1,085.2	1,089.5	1,124.0	1,249.0	1,465.0
財 政 支 出	649.4	1,111.0	1,273.9	1,212.7	1,115.0	1,153.3	1,292.5	1,515.0
財 政 收 支	13.5	10.1	-170.6	-127.5	-25.5	-29.3	-43.5	-50.0

* 예비결산

5. 對外貿易

中共의 對外貿易은 1970-84年間 10배이상 늘어나 84年 約500億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978-80年 사이에 年平均 30%이상 急伸張勢를 보였다. 1981-82年間에는 輸入抑制政策에 따라 貿易伸張率이 일시 鈍化되었으나 1983年以後에는 다시 擴大되고 있다.

輸出은 政府의 強力한 「輸出先行型」 促進政策에 따라 1978年以後 계속 增加勢를 보여 1984年에 244億 달러를 記錄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신장세는 鈍化趨勢에 있다.

現代化政策의 초기에 방만한 輸入으로 輸入이 大幅 增加하였으나 調整計劃 實施以後 수입은 抑制되어 왔으며 특히 安定化計劃이 實施된 1981年과 1982년에는 수입이 감소되고 1983년부터 다시 신장세로 반전하여 1984年 中에는 255億달러를 記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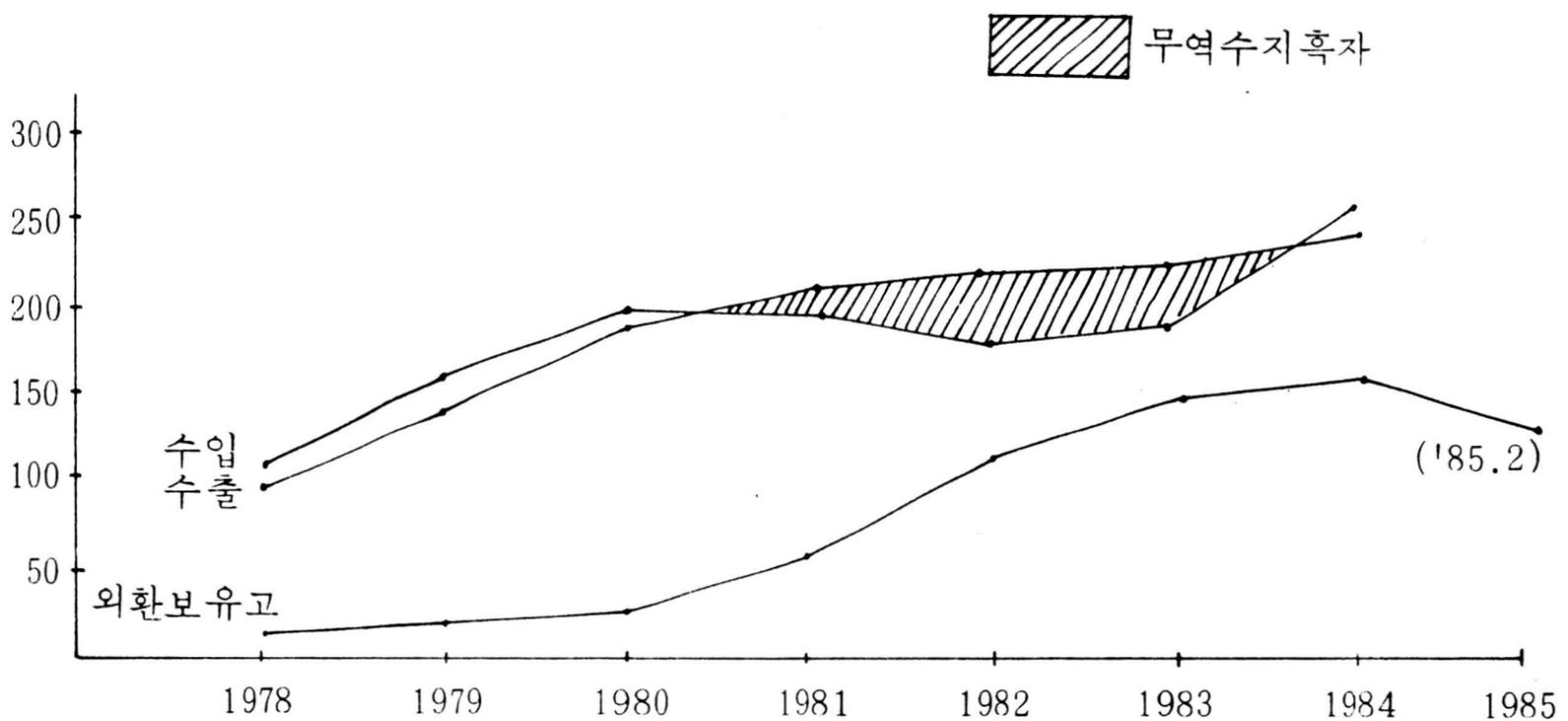
1960年代에는 黑字基調에 있던 貿易收支가 1970年代 특히 1978年以後 現代化推進에 따른 設備·技術導入이 급증하여 1980년까지 赤字를 기록하였다. 1981년부터는 安定化計劃에 따라 投資減縮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

<表 8> 輸 出 과 輸 入 (단위 : 백만달러)

	197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1/4)
수 출	2,260	9,745	13,658	18,274	20,893	21,819	22,197	24,440	5,150
(신 장 율)	(2.5)	(28.4)	(40.2)	(33.8)	(14.3)	(4.4)	(1.7)	(10.1)	(2.7)
수 입	2,326	10,893	15,675	19,550	19,482	17,478	18,530	25,530	6,040
(신 장 율)	(27.5)	(51.0)	(43.9)	(24.7)	(-0.3)	(-10.3)	(6.0)	(35.8)	(54.5)
무역수지	-66	-1,148	-2,017	-1,276	1,411	4,341	3,667	-1,090	-890

수요가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黒字로 반전하여 1983年 중 37億 달러의 黒字를 記録하였다. 그러나 1984년에는 무역권한 地方分權化에 따른 일시적인 輸入擴大가 나타남에 따라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圖 3> 貿易收支 및 外換保有



6. 外資 및 技術導入

「自立更生」을 표방해 온 中共은 1960年代 초까지 주로 社會主義諸國으로부터 設備輸出金融을 이용하는데 그쳤고 프로젝트 建設 自體는 自力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1960年代 초 中·소紛爭 이후에는 國際的孤立을 배경으로 外資導入 뿐만 아니라 技術導入도 배제해 왔다. 그러나 現代化政策推進과 함께 外資導入體制가 整備되지 않는채 外資가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프로젝트 推進을 위한 內資調達과 채무반제 등에 대한 問題가 야기되었다.

中共의 外資導入政策은 自立更生을 原則으로 하고 外資導入을 補助的인 수단으로 活用하는데 있다. 特定國에 대한 과당한 依存을 피하기 위해 外資導入線을 다양화하고 外資導入形態도 直接投資, 政府開發援助, 輸出金融, 商業借款등 多變化 趨勢를 보이고 있다. 原則적으로는 合作등 投資를 중시하고 國際金融機關 海外政府의 장기저리차관을 우선하며 일반 商業借款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外資導入線部門은 交通, 에너지, 技術改造分野이며 低利 金融은 教育, 醫療, 農牧業등에 이용하고 大規模外資는 交通, 에너지開發에 投資하고 있다. 技術改造分野는 輸出信用을 이용하는 등 外資의 조건에 따라 이용부문도 달리하고 있다.

1) 資本導入

1979年 최초로 資本을 導入하기 시작한 이래 1983年말까지 外資導入額(協議額)은 232億달러이며 그중 차관이 165億, 直接投資誘致가 67億 달러였다. 中共은 1983年부터는 借款보다도 直接投資誘致를 통한 外資導入에 중점을 두고 있다.

中共의 借款導入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좋은 장기저리의 公共借款 내지 우호기금에 의한 차관만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상업차관을 피하는 형편이며, 차관 導入線도 주로 日本政府, 輸銀, 세계그룹, 쿠웨이트(오일달러)와 벨지움, 덴마크등 일부 EC國家들로 되어 있다.

中共의 直接投資 誘致가운데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導入形態는 45%가 合作經營이며 중공은 실제로 合作企業方式에 의한 投資誘致를 積極 獎勵하고 있다.

<表9>

中共의 外資導入 現況 (1979-1984)

(單位：億달러)

	1982 年末累計			1983 年末累計			1984 年上半期末累計			1984 年實績		
	契約 件數	契約 金額	使用 金額	契約 件數	契約 金額	使用 金額	契約 件數	契約 金額	使用 金額	契約 件數	契約 金額	使用 金額
借 款	61	152.14	108.71		165.4	118.6			125			13.2
中國銀行借款	22	75.60	75.60									
外國政府借款	29	52.33	14.78									
國際金融機關借款	10	17.91	9.35									
其 他		6.30	8.98									
直 接 投 資	1,792	49.58	17.69	2,311	66.8	27.5	2,957	78.9	33		29	13.4(2)
合 資 企 業	83	1.41	1.03	190	3.4	3.2	362	5.4		714	11	(40.3)
合 作 經 營	792	27.26	5.30	1,047	29.5	7.5	1,372	34.8				
海上石油共同開發	12	9.99	4.86	31	20.4	6.1	31	24.4				5.2
補 償 貿 易	872	7.25	4.13	998	9.3	7.8	1,137	10.87				
其他 (100%外資를包含)	33	3.67	2.37	53	4.2	2.81	55	6.0		26(1) 74(2)		
合 計	1,853	201.72	126.40		232.2	146			158		48	26.6(2) (173)

註：(1) 1984 年度의 新規 100%外資企業設立數

(2) 1984 年度의 ()內 數字는 1979 年 以後의 累計

合資企業投資 認可件數는 1983 年末 190 件에서 1984 년에는 904 件
 14.4 億달러로 급증하였다. 合資企業方式에 의한 直接投資誘致 實績은 分野
 別로 機械·電子·야금·輕工業·紡織·觀光·요식·호텔등이 주종이며 國別
 로는 香港·美國·日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分野別 合資企業 誘致現況 (認可基準 1979-83)

<表 10>

(單位: 백만달러)

	企 業 數	外 資 規 模	平均外資規模
輕工業·紡織·피혁	40	59.3	1.5
機械·電子·야금	36	102.7	2.9
石油·化學·플라스틱	15	19.2	1.3
觀光·요식·호텔	16	65.3	4.1
運 輸·通 信	4	6.9	1.7
農 · 牧·漁 業	4	3.1	0.8
販賣業 (貿易包含)	14	6.5	0.5
食 料·飲 料	16	12.4	0.8
建 資 材	8	8.6	1.1
技 術 用 役	23	21.6	0.9
其 他	14	10.4	0.7
合 計	190	316.0	1.7

合作經營方式에 의한 百만달러이상 規模의 直接投資는 觀光·요식·호텔
 建設·不動産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製造業 中心의 合資企業의 경
 우와는 대조적이다. (단, 百만달러이하의 合作經營企業 900 個 가운데는 製
 造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國別誘致現況은 香港이 거의 대부분이며

1981年以後 美國·日本·싱가포르가 조금 進出하고 있다.

2) 技術導入

中共은 1980-84.6 중에 646件的 技術導入契約을 체결하였다. 年度別로는 技術導入件數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分野別로는 電氣·電子·機械·石油化學·프라스틱·輕紡織·鐵鋼의 순으로 도입되어 있다.

技術導入形態로 보면 技術協力·프랜트·合作生産(經營)形態에 의한 技術導入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中共은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技術을 導入하고 既存企業의 技術改造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政策趣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中共의 主要技術導入對象國은 日本·美國이며 라이선싱에 의한 技術移轉에 있어 日本은 수송기기, 家電製品, 精密機器, 農產品, 食品加工, 유화공업 등에서 美國은 石油化學·電氣設備·鑛山開發 등에서 技術移轉을 하고 있다.

V. 中共의 經濟體制改革的 評價

1. 體 制

現在 中共經濟는 全般的인 改革 (Reform) 과 調整 (Adjustment) 期 (1981-85) 에 처해 있으며 경제의 體制的 變化 (주로 組織的이고 機能的인 部門의 改革) 와 구조적인 調整이 同時에 推進되고 있기 때문에 經濟의 體制·構造·政策·運用등 全般的인 分野에서 커다란 과급 效果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2年동안 中共의 指導者들은 改革과 調整이라는 두개의 目標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不調和」를 解消하는데 모든 努力을 경주하였다. 改革과 調整중에서 모순이 야기될 경우에는 ‘調整’ (體制的이고 機能的인 것보다는 構造的인 分野) 에 보다 우선권을 두어 왔다.

經濟體制 全般에 걸쳐 부분적인 改革이 促進되고 強化되어 왔으나 財政管理·課稅·信用·價格決定·對外貿易의 分權化等과 같은 分野에서는 다시 中央政府의 統制가 強化되고 있다. 특히 體制的 骨格, 즉 計劃經濟의 基本的인 틀과 中央集中管理 形式이 여전히 相當分野를 支配하고 있다.

- 生産手段의 公有制 (事實上 政府의 獨占)
- 資源의 미시적 혹은 거시적 配分에 관한 中央의 집권화
- 垂直的인 官僚體制·計劃의 樹立過程에서 上部에서 下達하는 式的 命令支配
- 資源의 配分에서 貨幣의 수동적 役割

- 對外貿易의 國家獨占・國內價格을 國際市場價格으로부터 完全隔離
- 人力과 生必品の 行政的 配分

이러한 體制改革의 制限的 要素를 고려해 볼 때 調整期間동안 中共의 體制改革과 變化는 여전히 초보적이고 實驗的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이후에도 「中國式 社會主義」를 定着시키기 위한 政府의 努力이 強化될수록 부분적인 改革과 變化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改革過程에서 나타난 政府의 分명한 目標은 「計劃」을 犧牲해서까지「市場機能」을 擴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들면 생산자에 대한 活動의 自由・인센티브의 擴大, 市場需要에 따른 供給의 增大와 같은 措置가 效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면서도 총체적이고 부분별 改革이 있는 다음에나 실시되었다. 體制改革의 制限的인 要素가 여전히 體制의 上層構造의 本質的인 面과 關聯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며 장애의 폭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어느면에서는 지난 2年동안의 改革措置가 거시경제적 調整을 더욱 어렵게 만든 부문도 있었다. 예를 들면 특히 가격 決定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많은 品目에 많은 自由를 부여함으로써 「開放性 인프레」를 야기시키기까지 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마찰은 經濟體制의 일부분만을 改革한데서 오는 결과이며, 農民・勞働者와 管理人들에게는 實質的인 인센티브가 提供되고 많은 자치권이 부여된 반면 價格改革의 推進이 완만하게 推進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장메카니즘의 擴大適用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과 商業機關은 여전히 強化되지 않아 「市場」이 效率的인 機能을 發揮할 수 없었다.

때문에 中共政府는 改革의 問題點에 대해 총체적인 細部計劃을 세우는데 전력할 것이며 改革과 調整사이의 상호보완 조치가 계속 講究될 展望이다.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적인 安定과 구조적인 均衡을 유지하면서 改革을 推進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體制改革은 推進過程이 장기적이고 완만할 방식이 될 것이다.

2. 計劃과 管理

中共의 計劃經濟는 改革과 調整에서 얻어지는 「體制的 效果」(x-efficiency)를 최대한 높이는 선에서 짜여질 것이며 中央集權的인 計劃의 範圍는 점차 縮小될 것이다.

이제까지 中共의 經濟計劃體制的 가장 큰 결함도 長期計劃이 없다는 점이다. 計劃과 管理體制가 「일년단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未來에 대한 計劃까지도 念頭에 둔 치밀한 長·短期 計劃이 要求되고 있다. 왜냐하면 現在와 같은 「資源의 動員」에만 焦點을 둔 計劃管理體制下에서는 資源活用이 能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資源活用に 焦點을 둔 改編이 부단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計劃管理上的 問題로서 國土가 廣濶하기 때문에 中央과 地方이 行政적으로 유기적인 機能을 갖거나 地方間的 均衡을 유지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다. 과거 20年동안 행정관할권의 地方移讓(decentralization)은 地域間的 不均衡을 초래하였으며, 이와 반대되는 中央集權化가 強化되었을 때는 地方의 自治力을 저해하고 地方의 要求를 충족시키는데 失敗하였다. 管理의 側面에서 中央部署間 혹은 部署內에서의 부

門間的 水平的 協力도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다. 中共의 行政組織의 特徵인 系列화된 高度의 ‘垂直的 統合’을 보다 유기적이고 機能的으로 水平結合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는등 體制의 改編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展望이다. 특히 3 - 5年을 주기적으로 카바하는 「回轉計劃」(rolling plan)을 가지고 매년 혹은 거의 2년마다 組織的인 改編과 改革의 過程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본다면 中共이 體制上的 「安定」을 이룩한 정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改革과 改編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革命過程中에 있는 政權」(revolutionary reigme)이라는 性格上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經濟의 長期目標와 展望

中共은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을 위하여 2000年까지 農工業 總生産額을 4배로 증가한다는 目標아래 1981-2000年 사이에 農業을 年平均 5% 工業生産은 7.7% 對外貿易은 7.5%씩 增加시키고 人口增加率을 1%로 낮추며, 1人當 消費를 5.1% 增加시킬 것을 計劃하고 있다. 특히 6次 5個年計劃期間을 經濟의 調整期間으로 잡고 저성장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經濟活動의 活性化에 힘입어 1983年中 計劃目標를 대체로 초과 달성하였다.

80年代 초에는 重工業의 成長鈍化로 工業生産增加率이 과거보다도 낮았으나 農業生産이 好調를 보여 農工業總生産 增加率은 거의 年平均 8%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1981年 安定化計劃 實施以後 經濟는 全部門에 걸쳐 加速的으로 發展하여 1984년에는 農業·輕工業·重工業部門이 공

히 14%대의 高度成長을 記錄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약간 경기과열현상을 빚기는 하였으나 2000년까지 年平均 7%대의 成長目標達成에 고무적인 事實로 分析되고 있다.

1986-90年 第7次 5個年計劃期間중 農·工業 總生産增加率을 年間 6-7%대로 設定하고 지속적인 安定成長을 추구하면서 90年代 高度成長의 발판을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

1986年以後 重工業部門과 農業部門이 安定成長을 지속할 수 있다면 2000年代의 제반 장기목표들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長期目標 達成如否에 關聯이 되는 것은 生産性向上, 에너지의 效率的利用, 所要技術, 設備의 導入을 위한 工產品 輸出增大 및 外資誘致가 效果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關係해서 經濟의 效率 增進을 위한 經濟의 體制改革과 對外開放 政策의 成敗가 中共經濟의 長期展望을 左右하게 될 것이다. 中共이 2000年代까지의 長期目標를 達成할 경우 GNP는 1980年の 2855億 달러에서 1조 1,400億달러로, 1人當 GNP는 1980年の 291달러에서 880달러로, 對外貿易額도 1980年の 378億달러에서 1600億달러로 각각 증가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VI. 北韓의 經濟發展方向

經濟體制的인 側面에서 北韓의 體制는 1930年代 「스타린 모델」(dictatorship model)로서 個人的 所有를 完全 廢止하고 모든 生産手段을 國有化하며 특히 行政手段을 통해서 經濟의 深部까지 「纖細調律」(fine-tuning) 하는 式的 極端的인 計劃經濟體制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한 赤化統一이라는 우선적 政策目標에 맞추워 經濟의 세밀한 分野까지 計劃化하고 그 政治的 考慮要因에 의해 선정된 分野에 集中的으로 財源을 配分함으로서 이제까지 그런 데로 計劃經濟의 과실을 獲得할 수 있었다.

특히 政策的인 側面에서도 北韓은 철저한 自立經濟(Autarkie)體制를 고수하고 있다. 적어도 1966年 10月 黨代表大會에서 社會主義建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經濟的 自立을 強化하는 것이며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일관된 目標라는 점을 強調한 이래 對內指向的 成長政策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內指向的 成長戰略이 진정한 의미의 自立度を 높인다는 健全한 經濟的 思考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閉鎖經濟를 指向함으로서 國際經濟에 參與하지 못하는 經濟的 制約性을 正當化시키는 구호일 可能性이 높 은 것이다.

우선 本質的으로 計劃經濟의 必然的인 부산물인 資源配分の 非效率性이 支配하는 北韓經濟로서는 外國과의 競爭에서 國際分業의 利益을 享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根本的인 理由는 外國에 대해 門戶開放의 경우 北韓

住民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外國과의 比較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지금 까지 사로잡혀 있는 「이데올로기적 환각」에서 깨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外國과의 經濟交流나 文化交流에서 수반되는 여러가지 展示效果들이 北韓住民들에게 회의를 안겨주고 심각한 挑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閉鎖的인 「自立」을 더욱 強調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國土는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한 北韓과 같은 環境의 國家에서 閉鎖的인 自立經濟의 추구는 별다른 選擇의 여지없이 勞動과 資本등 投入要素등의 부담한 증가에 의해서만이 成長이 可能한 것이고, 이러한 成長은 곧 限界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더욱이 北韓의 경우에는 軍事目的에 의한 勞動力の 動員은 他産業部門에 人力不足現象을 초래하게 되고 軍需産業 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은 産業間의 投資效率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8年부터 시작된 第2次7個年 人民經濟發展計劃(1978-84)以後의 北韓經濟는 새로운 可能性을 모색하고 있는 痕跡도 없지는 않다. 특히 과거 6個年計劃(1971-76)과 比較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的인 事實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業績指向的 政策이 아니라 비교적 과거의 計劃보다는 目標를 낮게 잡고 있는 점,

둘째, 과거와 같이 國防建設을 중시하지 않는 것.

셋째, 自力更生의 기초위에서 技術革命을 強調하고 있는 점.

네째, 經濟法則과 經濟原則을 強調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基本課業으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다 그쳐 社會主義經濟土臺를 強化하여 人民生活을 한단계 더 높이는데 두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變化를 시사한다. 첫째는 經濟開發戰略이 外然的 成長으로부터 「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 으로 轉換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經濟의 科學化·現代化를 통해 그 기초를 다진다는 의지에서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經濟政策面에서 生産要素의 質적 改善을 위한 措置, 즉 人力의 教育訓練, 技術革新, 生産組織의 效率的 運營과 같은 措置를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價値觀, 人生觀에도 連鎖的인 波及效果를 일으켜 결국에 가서는 人民의 「生活스타일」까지도 變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약적인 상상도 可能하게 한다.

또다른 하나는 人民의 個人消費水準을 높인다는 것이다. 과거 30년동안 北韓은 人民들의 生活向上에 대한 要求를 外面한 채 高度의 蓄積과 生産部門에 대한 偏重投資를 強行해 왔다. 따라서 生産水準에 비해 消費水準이 不均衡하고, 또 이런 不均衡때문에 勞動生産性的 向上이 부진하였다. 결국 生産財의 生産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勞動力을 投入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消費財生産과 農業이 犧生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따라서 勞動生産性を 發展의 原泉으로 삼기 위해서는 人民生活의 向上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人民生活의 向上은 또한 必然的으로 貯蓄·投資와 消費의 合理的인 配分이 前提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投資의 方向과 政策이 민수분문으로 轉換될 때 經濟의 質的 改善의 可能性을 豫

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集約的 成長을 試圖하면서도 北韓은 그 經濟政策의 第1目標은 自給自足에 두고 工業化政策을 追求하였기 때문에 重工業이 여전히 工業發展의 선도부門으로 중시되고 輕工業 및 農業의 成長은 消費需要를 充足시켜 주는 水準에 두어 왔다. 이와같은 工業化政策의 性格은 처음부터 北韓의 對外部門을 制限하는 要因이 되었다. 즉 北韓의 對外貿易이 生産的인 國民經濟의 「補助部門」으로 전락하여, 단지 擴大再生産을 圓滑히 할 경우에만 최소한 利用되는 이른바 社會主義 貿易의 本質 및 機能을 유지하는 水準으로 退化시켜 버린 것이다.

특히 經濟開發에 있어서 對內指向的 政策이 갖는 否定的인 側面은 國民經濟內에 體化된 技術移轉과 이에 따른 生産成 提高를 위해 輸入需要가 불가결할 때 이 需要를 위한 外換調達을 輸出의 方式 이외에는 다른 外換가득원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北韓經濟의 對內指向性은 必要한 輸入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外換을 제한함으로써 工業化 過程에서 必須的인 「技術的 要因」 즉 資本·施設改造, 設備·技術導入의 重要한 制約要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外換가득원(輸出産業)을 積極的으로 開發·發展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北韓에서도 對內指向的 經濟發展 戰略追求로 인해 경직되어온 對外貿易도 80年代부터는 經濟發展을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하나의 主導的인 部門으로 조심스런 轉換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작은 증거가 1979年 金日成의 「新年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은 經濟政策의 優先順位에서 對外貿易을 높이라는 指

示를 下達하고 經濟의 모든 부문에서 輸出品의 우선적인 生産을 重要的 課題로 제기하였다.

여기서도 輸出品 生産을 強調한 것은 70年代에 發生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外債問題의 解決과 새로운 技術設備의 導入을 위한 外貨獲得의 必要性 때문이었다. 80年의 新年辭에서도 輸出問題는 더욱 強調되었다. 그리고 對外貿易에서 信用第一의 原則을 고수할 것과 經濟의 각부문마다 輸出品生産을 중시할 것은 勿論 輸出品의 포장을 改善하고 納期를 嚴守할 것과 같은 구체적인 輸出振興策을 提示하였다.

그후 규모면에서 北韓의 對外貿易은 劃期的인 伸張을 하게 된다. 1976年 10億달러의 規模가 1977년에는 14億달러, 1979年 25億달러 1980年 22億, 1983年 23億등 年度別로 심한 變動을 보이고는 있으나 절대 규모면에서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內部指向的 政策의 性格때문에 工業化에 대한 한정된 역할에 그친 것은 앞에서 言及한 그대로이다.

80年代초부터 北韓은 이러한 小極的인 貿易政策을 脫皮하여 對外貿易을 經濟發展의 主導的 部門으로 育成하기 위하여 部分的인 轉換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轉換이 經濟成長에서 對外貿易이 成長을 선도한 다든지 혹은 「輸出主導型」 「輸出先行型」 開發戰略이라고 보기에에는 시기 상조라고 볼 수 있다. 단지 輸出의 增加로 外換輸入이 增加하고 成長에 必要的인 輸入需要를 용이하게 하여 成長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對內指向的 工業化政策과 「自立」 經濟에서 露出되는 問題를 보완하기 위한 開發戰略의 「成熟化」과정의 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